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
----------	------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 의 자 : 정재환, 홍영진, 김태욱,  
김도운, 박경흠, 이명녀,  
문기호, 문희성, 안영호,  
강혜순

## 1. 주 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에 우리 의회는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을 독단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현실화 하고 있음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국시구군의회,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4. 결의문(안) : 붙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120만 울산시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에 우리 의회는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오염수 저장탱크의 만재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계획대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23일, 2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시찰단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질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 중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